

미래 먹거리 창출... '농어촌수도 해남' 육성

올해 새해설계

명현관 해남군수

기후변화 대응·탄소중립 미래 농어업 선도 기반 구축 기회발전·교육발전특구 등 장기 성장 전략 '속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역풍장범(逆風張帆)'의 자세로 군민과 함께 더 큰 도약을 이루겠습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농어업을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미래산업으로 전환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농어촌수도 해남'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명 군수는 해남의 농어업이 전국 최대의 경기면적과 청정 땅끝바다, 선도

적인 농어업인의 조화를 통해 대한민국 식량 안보를 책임져왔다고 평가하며, 기존의 농어업 역량을 총괄집해 농림해양수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 전환을 통해 지역 미래 성장의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2025년 해남군은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와 농업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수산기자재클러스터, 김치원료공급단지, 탄소중립 에듀센터,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등 주요 국책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농어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기반을 구축할 계

획이다.

또한 쌀, 배추, 고구마, 김 등 4대 농수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저탄소·항암·항당뇨 특화사업 발굴과 경쟁력 있는 신작목 육성을 통해 고부가가치 농수산업을 실현할 예정이다.

변화하는 소비 환경에 맞춰 안전 먹거리 가공, 온·오프라인 유통 개선, 관광과 체험을 융합한 복합화 전략, 수출 확대 등 지속 가능한 농어업 모델을 구상 중이다.

해남군은 지난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지정,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2단계 구간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을 바탕으로 장기 성장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데이터센터파크, 해상풍력배후단지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

의 기업 유치와 신산업 육성에 주력하며, 교육발전특구는 교육과 보육, 일자리 연계를 통해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예정이다.

명 군수는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사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지만, 미래세대와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20년, 30년 후를 내다본 기반을 꾸준히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남군은 올해 예산산 8천973억원 중 32%를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투입하며,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경제, 복지, 기초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국·도비 예산 3천535억원을 확보해 지역 현안사업에 탄력을 더할 예정이며,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2단계 조성과 신안 압해화원 국도 77호선 연결

도로 개설 등 광역 교통망 구축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경기 침체 극복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 안전망 구축, 계층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 해남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조기에 추진한다. 생활인구 증대와 머무르는 관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권역별 관광개발사업과 스포츠마케팅 기반 확충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명현관 군수는 “장기적인 경기 불황과 국내·외 불안정한 정세에도 역풍장범(逆風張帆)의 자세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으뜸 해남의 비전을 실현하겠다”며 “군민과 함께 더 큰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기자

목포시,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 '뒷말'

공정성 부족·특정 지역 출신 승진 편향 의혹 확산 시 “능력·성과 중심 일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 취지”

목포시가 6일자로 단행한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일부 인사를 두고 ‘보이지 않는 손’의 개입, 친인척 특혜, 특정 지역 출신 편향 등 의혹이 제기되며 청사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6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승진 78명, 승진의결 8명, 전보 307명, 신규 임용 53명 등 총 468명 규모다.

시는 이번 인사에 대해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를 기본으로 소수 직렬 인배, 경력, 업무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승진 적체가 심한 하위직 승진을 대폭 확대해 조직 활력 강화와 사기 진작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직급별 승진 인원은 ▲4급 3명 ▲5급 3명 ▲5급 승진의결 8명 ▲6급 17명 ▲7급 24명 ▲8급 31명 등 총 82명이다.

그러나 일부 인사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4급과 5급 승진 및 승진의결 인사를 두고 시장 측근 전직 간부공무원의 친인척 특혜와 진도 출신 공무원 편향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4급 승진에서는 경력과 나이가 많은 공무원들이 배제되고 승진 최저연한을 갖 넘긴 공무원이 발탁돼 기존의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5급 승진의결에서도 경력이 부족한 공무원이 발탁된 사례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직렬 5급 승진의결에서는 두 차례 탈락했던 A팀장이 많은 경력에도 불구하고 6개월 만에 또다시 전보됐으며, 반면 A팀장이 맡았던 직위의 팀장들은 이번에도 승진 대상에 포함됐다.

전문직렬 무시와 잦은 전보도 논란이다. 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이 체육시설 업무로 발령됐다가 6개월 만에 종합

민원실로 전보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일부 동장들의 잦은 전보로 주민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목포시공무원노동조합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인사에 대한 불만과 조롱이 이어졌다.

한 게시글은 “승진하려면 진도 출신으로 태어나야 한다”며 특정 지역 편향을 비판했고, “청렴도 꼴찌는 시장 때문”이라며 시장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댓글도 다수 올라왔다.

일부 공무원은 승진 기회에서 계속해서 배제된 개인적인 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 공무원은 “가족 때문에 승진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인사 발표 하루 전에 속상함을 표현하기도 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원칙을 재확인하고, 자질·경력·시정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오랫동안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온 직원을 발탁해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목포=정해선기자

무안군,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돌봄서비스 지원

전담 인력 긴급 파견...돌봄 공백 최소화

무안군은 6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피해자 가족을 위해 무안국제공항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긴급 지원하고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항 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무안군은 지난달 30일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요청을 받고 무안군 가족센터를 통해 아이돌보미를 긴급 파견했다.

아이돌보미는 무안국제공항에 마련된 유가족 헬터에서 피해자 가족을 방문한 친인척 가정의 아동들에게도 함께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공항 내 2층 4번 게이트 옆에 공간을 마련해 아이돌봄 전담인력과 아

이돌보미를 상주시켜 장래 절차 진행 및 사고대응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피해자 가족을 지원한다.



돌봄서비스 신청은 공항 1층 2번 게이트 앞 긴급돌봄지원센터에서 현장 신청받고 긴급돌봄서비스 대표번호(1522-0365)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사고 수습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가족을 위해 돌봄서비스 등 세심한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기자

강진 반값여행, 정부 최우수 시책 선정 '주목'

지방소멸 위기 극복 혁신 모델 인정

강진군은 6일 “군이 추진한 ‘반값여행’ 정책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경제 회복 최우수 시책으로 선정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강진 반값여행’은 강진 관내 소비금액의 절반을 지역화폐 ‘강진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전국 최초의 반값 지

원 정책이다.

이 정책은 관광객의 재방문과 지역 내 재소비를 유도해 지역화폐 회전을 높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며 강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강진군은 국비 지원 없이 자체 재원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해 관광상품 개발과 연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

책을 펼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성과로 강진군은 지난달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지역경제 회복 최우수 자치단체로 뽑혔으며, 2024년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하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혁신 모델로 인정받았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반값여행 정책이 중앙정부에서 인정받아 기쁘다”며 “2025년 생활인구 증대 원년을 맞아 지역경제 회복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진=정영록기자



완도군이 지난해 6월 NH호텔에서 열린 제2회 정보고향상 수상자 세계대회에서 발칸 우드레 불가리아와 완도 특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완도군 제공)

완도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가속화'

2천만여달러 계약 체결...전북 가공제품 유럽 수출 물꼬

완도군이 수산물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판촉 활동을 적극 펼친 결과 지난해 2천22만달러(약 297억원)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수산식품박람회, 부산국제수산EXPO 등에 참가해 475건의 바이어 상담을 통해 451만 달러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를 ‘유럽 시장 개척의 원년’으로 삼아 장보고한상세계대회와 연계해 오스트리아와 비엔나에서 수출 상담회를 개최해 1천27만달러의 수출 협약을

성사했다. 특히 네덜란드, 불가리아 등에는 전북 통조림과 순살 전북 등 전북 가공제품이 수출돼 유럽 시장 진출 물꼬를 텃다. 완도군은 지난해 5월 인도를 시작으로 미국, 캐나다, 불가리아, 네덜란드,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판촉 행사도 개최

해 수산물 60만달러 가량을 수출했다. 캐나다 바이어와는 현지 프로모션 행사를 통해 300만달러 수출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완도군은 국내 소비 촉진 활동에도 구슬땀을 흘렸다. 전북 홍수 출하 시기

에는 시군별 판촉전과 다각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 업체와 전북 판매 행사를 14회 진행했다.

수산물 소비 판로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지난해 28일 무안에서 열린 ‘2024 전남 수출 기업·관계자 진전 대회’의 농수산물 수출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완도군은 내년에도 특산물 세계화 및 수출길을 넓히고자 분주하게 움직일 계획이다.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식품전시회 참가 및 캐나다 시장의 입지를 확대하기 위해 KORA와 협업하고, 뉴욕에서 열리는 장보고한상 세계대회 개최 시 특산물 판촉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완도=윤보현기자

영광군, 전기차 충전시설 유료화

민간사업자 선정...42곳·104기 충전기 설치

영광군은 “최근 전기차 충전시설(사진)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유료화를 본격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스포티움, 만남의 광장, 구우시장 주차장 등 42곳에 104기의 급속·완속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군비 투입 없이 국비와 민간투자를 병행해 진행됐다. 이번 충전시설은 화재·폭발 사

고 발생 시 영업배상책임보험(1사고당 10억원·연간 50억원 한도)을 적용하며, 장애 발생 시 실시간 모니터링과 원격 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품질 상시 관리와 소화기 설치, 365일 24시간 통합센터 운영 등으로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충전 요금은 환경부 고시 요금과 동일하거나 저렴하게 책정됐으며, ‘아이파크’ 앱을 통해 회원 가입 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영광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무료 충전소의 집중 현상, 노후 부품 문제, A/S 지연 등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고 군민 편의를 증대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충전 인프라 확충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에너지 전환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기자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하세요”

영암군, 내달 7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서

영암군은 6일 “오는 2월7일까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제도다.

이 기간 신청자 중 심의회를 거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

면, 3월말 1인당 60만원의 영암사랑상품권을 카드나 종이 상품권으로 받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2024년 이전부터 전남도에 주소를 두고, 경영체를 등록해 계속 농·어·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은 지급받을 수 없다.

김준두 영암군 농업정책과장은 “어려운 영농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농업을 지키고 있는 농어민의 소득 안정에 도움을 주겠다”며 “한명도 빠짐없이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영암군은 지난해 1만811명에게 농어민수당 69억8천600만원을 지급했다. /영암=나동호기자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세대를 분리한 사람 등도 마찬가지로 공익수당을 받을 수 없다.

김준두 영암군 농업정책과장은 “어려운 영농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농업을 지키고 있는 농어민의 소득 안정에 도움을 주겠다”며 “한명도 빠짐없이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영암군은 지난해 1만811명에게 농어민수당 69억8천600만원을 지급했다. /영암=나동호기자